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들 좌천 논란

광주·전남 총경급 인사 발표

윤주현·이지은 112상황팀장으로 ‘수사구조개혁팀’도 과→계 축소 “경찰국 반대 따른 ‘문책성 인사’” 경찰청 “총경 복수직급제의 결과”

경찰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총경들이 주요 보직에서 줄줄이 배제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끈 ‘수사구조개혁팀’도 축소되는 등 경찰국 신설 반대에 따른 ‘문책성 인사’ 논란이 제기된다.

5일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경찰 총경급 457명의 정기 전보인사가 단

행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이 소위 ‘한직’으로 발령됐다.

먼저 윤주현 전 광주경찰청 수사과장(총경)이 광주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1995년 경찰에 임용된 윤 전 서장은 제주청 정보과장, 담양경찰서장, 광주청 정보과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21년 1월 광주 서부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지난해 광주경찰청 수사과장으로 보직 변경됐다.

윤 전 수사과장은 지난해 전국 총경회의에 참석했다.

전국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이지은 중앙

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도 이번 인사에서 전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임명됐다.

일선 서장까지 지낸 고참급 총경이 경정급 직무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전보된 배경을 놓고 ‘보복 인사’ 논란이 일었다.

총경회의 참석은 물론 평소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경찰 개혁과 관련해 소신 발언을 이어왔던 이은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경찰인재원 교육행정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당 자리 역시 주로 경정급이 맡아 왔다.

또 그간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끌어 온 수사구조개혁팀이 ‘과(課)’ 단위에서 ‘계(係)’ 단위로 축소되면서,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하운 광주경찰 직장협의회장은 “경찰국 반대 총경모임을 진행하는 등 우리와 함께 연대했던 이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좌천된 것이 몹시 안타깝다”며 “내부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상태다. 정부는 ‘복수직급제’를 교묘하게 이용해 불합리한 인사를 진행했다. 직책 차원에서 입장문 등 대처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른 경찰 역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발령을 보니 이번 총경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누가 봐도 문책성 인사다. 총경급 전보 인사가 늦어진 게 이 때문이었던 듯”이라고 한숨을 내

쉬었다.

경찰청은 지난달 도입한 총경 복수직급제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총경 복수직급제는 총경 바로 아래 계급인 경정이 맡던 자리를 총경도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인사 개편안’ 중 하나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경회의 참석자가 누군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총경들에 대한 112치안종합상황실 발령도 총경 복수직급제가 시행되며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직급제는 초임 총경에 해당돼 이번 인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웅색한 변명’이라는 것이 일선 경찰들의 평가다.

▶ 관련명단 17면 양기람·정성현 기자

이태원 참사 100일 “딸 사진 품에 안고 서울로...”

광주·전남 유가족 서울 추모대회 서울광장까지 2시간 거리 행진 “시민 관심 절실... 잊지 말아주길”

“국가가 먼저 나서서 유가족에 대한 올바른 예우와 진실을 알리고 책임자 처벌에 힘써야 하는데 그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서울에서 시민추모대회가 열린 지난 4일, 광주·전남 유가족들은 영정을 안고 아들·딸·형제를 잃은 ‘그곳’으로 다시 향했다.

유가족들은 대통령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외치며 국가로부터 희생당한 이들의 얼굴을 기억해줄 것을 시민들에 호소했다.

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전날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가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전국 각지서 모인 유가족들은 오전 11시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출발해 서울역을 지나 서울광장까지 약 2시간 동안 거리 행진을 진행하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목포 희생자 고(故) 박시연씨의 오빠 박도현씨도 이날 아침 일찍 부모님과 함

께 서울행 열차에 올랐다. 박씨는 지난 1월부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광주·전남지부장을 맡으며 진실규명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박씨는 거리 행진 내내 동생의 영정 사진을 쓰다듬으며 통곡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했다. 박씨는 마치 “팔다리 잘라내며 기어가는 느낌”이었다며 “가끔 ‘국가는 무얼하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분노를 표했다.

추모대회에서는 유가족들의 서울광장 분향소 기습 설치로 인해 경찰과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분향소 설치를 불허하자 유가족들이 기습적으로 장소를 옮겨 설치한 것인데, 서울시는 유가족 측에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다.

박씨는 이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게 눈과 귀를 막는 것 같다”면서 “계고장을 보낸 것은 유가족들에게 전혀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방적 통보가 아닌 ‘유가족과 협의해 안전한 장소를 알아보자’는 식의 태도를 보였어야 했다”라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박씨는 또 경찰 대처 상황에서 경찰과 유가족 간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도 전했다. 박씨는 “경찰 대처 상황에서 일부 유가족은 경찰과 공무원들 사이에 끼어 압박당했다. 그 상황을 직접 앞에서 본 우리가족은 ‘트라우마’를 느꼈다”고 힘겹게 말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100일 동안 진행된 경찰 수사, 국정 조사의 결과가 남긴 것은 ‘절망’ 뿐이라며 지역 시민들에 관심을 요청했다.

박씨는 “정부는 159명의 희생자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 혈안이다. 광주·전남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희생자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한편 이날 추모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유가족 150여 명을 포함해 시민 2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광주·전남 희생자 10명의 유가족 대부분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비 기자

▶ 지난 4일 서울광장 일대에서 진행된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에서 희생자 고(故) 박시연씨의 어머니가 딸의 영정사진을 안고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광주·전남지부 제공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